

< ⑤-1 새 체제에 바란다 / 이공계 고등인력양성 부문 >

‘규제’ 아닌 ‘진흥’ 행정 펼쳐야 통합효율성 발휘

글 | 이병기_ 과실연 상임대표,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blee@snu.ac.kr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고, 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해서 새롭게 업무가 시작되었다. 과실연은 그동안 5차례의 성명서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 방문, 과학기술인들의 연명에 의한 이명박 대통령 공개서한 일간지 광고 등 바른 정부 조직개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총을 비롯한 과학기술단체, 학회 등도 과학기술부 해체반대에 뜻을 같이하여 의견을 표명했다. 그 결과로 ‘교육과학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과학기술인인 김도연 서울대 공대 교수가 임명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일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롭게 출발하게 된 마당에 더 이상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수위에서 원래 기획했던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와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아, 교육과 과학기술 양면에 모두 발전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또 그것이 실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과학기술계도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 비쳐진 자화상을 들여다보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기까지 과학기술계가 기울였던 노력들을 되새겨보며 과학기술계에 남겨진 과제를 점검하고, 새로 발족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기의 기능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기술계의 과제 · 사회참여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계는 연초에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을 시작할 때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진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인수위의 초기 제안에 의하면 교육부의 대학입시 업무와 초·중등교육 부문을 떼어내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고 고등교육정책 부문만 떼어내서 과학기술부와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명칭이 원래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로 바뀌고 언론에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더 이상 안심하게 관망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과실연은 인수위의 원안대로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 업무를 통합하도록 하고,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방문해 유인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도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통일부, 여성부, 해양수산부는 존치를 위해 각을 세우면서 정작 정통부와 과기부는 야당에서조차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과학기술계가 보다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5일 과총을 비롯해 과학기술한림원 과실연, 여성과총, 물리학회, 화학회 등 과학기술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국회 기자실을 방문해 민주당 국회의원 40여 명과 연명으로 여야가 과학기술부를 존치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김기형



김기형 초대장관(왼쪽 두번째) 등 전직 과학기술부장관들이 서울 삼청동 인수위를 방문, 과학기술부를 폐지해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통합하는 정부 조직개편안 반대 호소문을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10대 이관 장관, 김기형 초대장관, 9대 박금식 장관. (2008년 1월 31일, 사진제공=연합뉴스)

여야 협상이 지루하게 연장되고 과학기술계의 움직임은 전혀 보도도 되지 않고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뜻밖의 강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2월 14일,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신화를 이룬 이종문 암벡스 회장과의 과실연 조찬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것이다. '밖에서 본 과학기술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이 회장은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획기적인 네트워크가 크게 부족하고 정치·사회적인 의식과 영향력이 낮아 이번 사태처럼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정계의 핵심 인물들을 만나 '과기부 정통부 폐지의 부당성'을 설득했을 때 그들은 "과학기술계는 조용합니다.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괜히 고생하고 다니십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계는 나름대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국회로, 인수위로 의견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이런 행동들이 새 정부와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참 부족했던 것이다.

2월 16일 밤, 전국에 있는 과실연 임원들이 전화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했다. 대통령 당선자를 면담하는 것, 신문에 연명으로 광고를 내는 것, 과학기술자들이 행동으로 시위하는 것 등 세 가지가 검토되었다. 우선 신문광고를 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 후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 연명으로 참여할 과학기술인들을 모으기로 했다. 광고에 드는 비용은 과실연 집행위원장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성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2월 19일 아침, 유력일간지 3군데에 "과학기술만 없애는 정부조직개편이었습니까"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주말이라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못했음에도 과실연 회원들 중심으로 11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해외에 출장중인 분들도 이때 일로 동참의사를 전해오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신문광고가 나가고 그 과정에서 새 정부에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물론 그 동안 과학기술계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종합적인 결과겠지만,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장관도 막판에 과학기술계 인사로 교체되었다. 신문광고가 나간 다음 날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극적으로 타협을 보았다. 비록 초기의 계획대로 작은 정부 구현도 효율적인 재편도 실패한 것이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 과정을 겪으면서 과학기술인들이 스스로의 자화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진지하게 숙고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평소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화나 자제가 부족했고 또 정치·사회 등 다른 분야나 언론과 소통하는데 소홀했던 점을 절감했다. 막상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되겠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정치권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이한 자세로, 또 "과학기술자들이 어떻게 머리띠를 매고 길거리에 나설 수 있나", "이미 결정된 일이니 우리가 나서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라는 고지식한 자세로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종문 회장은 "민주주의는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는 한마디로 이러한 자세들을 일축했다.

다행히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과학기술계가 달라졌다. 여러 단체

"과학기술부 폐지 반대" 과학기술계 항

일시 : 2008. 2. 5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



2008년 2월 5일 과학기술부 폐지에 반대하는 과학기술계의 공동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모습

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나 여론에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과거에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일로서, 이런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계의 자신감과 역량이 커졌고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과학기술계의 장래 과제는 먼저 대내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언론, 법조계와 상시 가동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과학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일반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과학문화재단 등 단체들과 함께, 또한 사이언스TV 등 언론과 함께 그 실천방안을 잘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제·지식 창조형 인재 육성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로서 출범을 했으니 새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며 우리 과학기술계도 정부가 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또 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하고 비판하는 건전한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새 정부와 과학기술부의 과제를 점검해 보자.

새롭게 발족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명의 부총리가 관할하던 교

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거대 부처이다. 교육 관련 업무만 해도 평준화 정책 개선, 영어몰입교육, 법학전문대학원 정착 등 현안문제로 가득하다. 이러한 교육 현안문제들에 휩싸여 과학기술은 뒷전에 처지기 십상이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부처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

장래의 지식기반 세계 네트워킹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지식과 과학기술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고도의 과학기술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지식 창조형'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만일 고급 인력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이 과학기술 정책과 효과적으로 융합할 수 있다면,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은 이를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지식 창조형 인재를 육성하는 지름길은 우수한 학생들을 이학, 공학, 인문학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 유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초·중등 및 대학 교육의 여건을 구비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며 헌신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능력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 그 관건이다. 규제가 아닌 진흥의 관점으로 교육 행정을 탈바꿈시킬 때, 이것

을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주요 과학기술정책과 전략을 장기간 숙고하여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그룹들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이 모방과 추적의 단계를 지나서 창의와 혁신의 선도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두뇌집단들이 필요하다. 기존의 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편하거나 과학기술 및 공학 한림원 등을 새로운 씽크탱크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과학기술의 결합은 대학들과 국책연구소들의 상생적인 결합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대학의 부족한 실험실습 여건을 연구소의 시설을 통해서 확충시켜주고 연구소의 고급 과학기술자들이 학생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원-원' 정책을 강구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될 것이다.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과학문화재단 등과 같은 모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단체들을 민간 주도형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무원 출신을 파견하여 수장을 삼으면 정부부처에 예속되어 본연의 임무 수행을 그르칠 우려가 크다. 최적의 민간 전문가를 찾아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초·중등교육을 지방자치에 넘기는 일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야 한다. 인수위원회가 제시했던 영어몰입교육이 자칫 초·중등교육의 지방자치 이관을 저해할까 우려가 크다. 초·중등교육을 완전히 지방자치로 이관하는 일을 서두르기 바람직하며, 그러한 새 틀 위에서 영어 교육 강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오히려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초·중등교육의 이관을 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영어 교육 강화에 추가하여 로스쿨 제도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고, 평준화 교육 개선 등 여러 과제들에 대한 험난한 노정이 예측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현안문제에 함몰될 것이 크게 우려된다. 대학과 법조계와 고시생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로스쿨을 둘러싸고 앞으로 몇 년 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미래 개척적인 과학기술 업무가 뒷전에 처지지 않도록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그 보완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행정이 규제 중심에서 진흥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서 과학기술행정과 상호 융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이 되어 바람 잘 날 없을 것이다. 일 본의 경험을 살펴보면, 교육 행정과 과학기술 행정 간 부처 조직의 벽을 뛰어넘는 융합은 통합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로 성격이 다른 영역인 만큼, 매우 현명하고 단호한 조정, 그리고 적극적 협력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 행정과 과학기술 행정이 잘 융합하여 그 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초·중·고교의 수학, 과학교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문 융합의 시대추세에 맞게 고교 문과-이과 구분을 실질적으로 철폐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상당 수준의 수학, 과학과목과 인문 사회 과목을 학습시켜 지식 및 과학기술 융합시대에 대처할 기초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 동안 교육과 과학기술이 서로 다른 부서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 부서에서 관장하므로 대안을 제시하기 훨씬 편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뚜렷이 표출되었다. 통일부, 여성부, 해양수산부만이 협상의 대상일 뿐,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는 논의의 대상도 안 되었고, 이것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과학기술 특별보좌관 겸 국가CIO를 두어 대통령을 보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보좌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조화롭게 협력하게 되면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규제 행정인 교육과 진흥 행정인 과학기술을 한 부처에 묶어두는 것은 효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당장 현안이 산적한 '교육'과 국가의 장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이 한 부서에서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으려면 애로점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다. 기왕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차에 융합 및 상생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일이지만, 만일 그 과정에서 교육행정과 과학기술행정에 차질이 빚어져 각 영역의 정상적인 기능과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차후 정부조직 보완 개편 시 과학기술부를 별도로 독립시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장래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후 경북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AT&T벨연구소 연구원, 한국통신학회 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